

2020 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종교자유국

요약

헌법은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7 월,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은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보고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2014 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다. 위원회는 많은 경우에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거의 어떠한 형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학대 사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었다. 같은 이유로 북한 내 종교 단체나 신도 수도 추산하기가 어려웠다. 기독교 권익 운동 비정부기구 (NGO)인 오픈도어즈 USA (ODUSA)는 연말 기준으로 약 5 만 명에서 7 만 명 가량의 주민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5 월, 비정부기구인 세계기독교연대 (CSW)는 20 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고, 이중 상당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는 2007 년부터 2019 년 12 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관련 출처를 근거로 북한 당국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가 사망 126 건과 실종 94 건을 포함하여 총 1 천 411 건이라고 보고했다. 10 월, 영국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인 코리아미래전략(KFI)은 1990 년부터 2019 년까지 종교 자유 침해에 관한 생존자, 목격자, 가해자였던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117 건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인과의 접촉, 예배당 등 종교 시설 참석 또는 종교적 신념을 같이 나누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피해자 273 명을 밝혀냈다. 코리아미래전략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체포, 구금, 장기간 심문, 가족의 처벌, 고문, 지속적 신체적 학대, 성폭력, 강제 낙태, 처형, 및 공개 재판 등에 처해졌다. 오픈도어즈 USA 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국가를 나타내는 연례 세계 박해 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19 년 연속 1 위로 꼽았다. 비정부기구들과 탈북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기독교인을 체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 구성원을 벌하는 방식을 자주 적용하였다. 오픈도어즈 USA 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노동 수용소로 추방되거나 현장에서 처형을 당한다”고 했다. 4 월 23 일,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국가비상방역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혼식, 장례식, 성년의 날 기념식과 제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 월, 유엔특별보고관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더욱 줄어들면서 이미 고착화된 인권 침해가 더욱 악화됐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정부기구들은 당국이 무속 신앙 및 “미신적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2019 년 9 월, 한 비정부기구는 기독교인들을 “종교적 광신도”이자 “스파이”로, 개종한 사람들을 “쓸모없는 자들”로 묘사한 정부 영상자료를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2019 년 파룬궁 신자들에 대한 단속도 시작했다고 보도하였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 기관과 시설들을 외부 선전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6 월, 북한 정부는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 등의 물품을 국경 너머로 보내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정부는 모든 주민들에게 종교 활동에 관여하거나 종교적 물품을 소지한 자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북한 내에서 기독교 활동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지하 교회의 존재나 지하 종교 조직의 범위는 여전히 수치화하기 어려웠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충성하지 않는 자로 분류되고 당국에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에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 및 비정부기구는 승인받지 않은 종교 물품이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한 출처에 의하면, 점집을 찾는 행위도 널리 퍼져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은 12 월 유엔 총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북한의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였고,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등의 가혹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 정부는 여러 다자간 통로와 다른 나라 정부,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들과의 양자 논의를 통해 북한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무장관은 9 월 바티칸 연설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북한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1 년 이래 북한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특히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 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우려대상국(CPC)’으로 지정되어왔다. 2020 년 12 월 2 일,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이와 함께 1974 년 제정된 무역법 (잭슨-베닉 수정조항) 제 402 조와 제 409 조, 그리고 동법 제 402(c)(5)호에 따라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재 조치들을 확인했다.

섹션 I. 종교 인구 구성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전체 인구를 2 천 560 만 명 (2020 년 중반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마지막으로 지난 2002 년 종교별 인구를 보고하였고, 각 종교의 전체 신자 수는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다. 북한이 2002 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북한 내 개신교 1 만 2 천 명, 불교 1 만 명, 가톨릭 800 명, 그리고 19 세기 한국 성리학에 기원을 둔 현대 종교인 천도교 신자는 1 만 5 천 명이다. 한국 및 기타 외국 종교 단체들은 북한의 종교인 수가 북한 당국이 보고한 것 보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별 종교 지표 데이터 프로젝트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States Dataset Project)에 따르면, 2015 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70.9%가 무신론자, 11%가 불교, 1.7%가 기타 종교, 그리고 16.5%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엔은 북한 기독교 신자 수를 20 만 명에서 40 만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기독교연구소(CSGC)에서는 기독교 신자 수를 10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오픈도어즈 USA 는 40 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기독교연구소(CSGC)는 2020 년도 세계 기독교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북한 인구 58%가 불가지론자, 15%가 무신론자, 13%가 “신흥 종교신자” (혼합 종교 신자), 12% 가 “민족 종교신자” (토속 신앙), 1.5 %가 불교, 그리고 기타 기독교, 이슬람교, 중국 민간 신앙은 다 합쳐도 0.5% 미만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를 갖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서 대다수가 개신교도였고, 가톨릭과 불교 및 기타 종교는 소수였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자체 수치에 따르면 종교 신자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 약 24 퍼센트에서 2002년 0.016 퍼센트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무속인 및 점술가와 상의하고 주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널리 행해진다고 하지만 수치화하기 어렵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러시아정교회 신부 5명이 평양에 체류한다고 보고하였다.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법적 토대

헌법은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도 공식 정부 문서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보건, 사회안전, 도덕 그리고 그 외 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제공된다”고 되어 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이고 선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불법적으로 보관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은 “돈이나 물건을 받는 대가로 미신행위”를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여기에는 점술 행위도 포함된다.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위의 두 조항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된 종교 물품을 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징역,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까지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정부 관행

정부는 지속적으로 거의 어떠한 형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 고문, 체포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체포나 처벌 여부의 검증이 여전히 어려웠다. 7월 30일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극심하게 제약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보고 기간 동안 이러한 기본권과 자유의 실현에 관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는 “정보에 관해 독점을 유지하고 조직화된 사회 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다양한 출처에 따르면 북한 내 상황은 2014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정보·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COI 최종 보고서 발간 이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많은 경우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4월 23일 국가비상방역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혼식, 장례식, 성년의 날 기념식과 제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4일 유엔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더욱 줄어들면서 자유는 더욱 제약을 받고 차별은 더 심해지며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구금 시설의 처우는 더욱 나빠져, 이미 고착화된 인권 침해가 더욱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10월 코리아미래전략은 *신념의 박해: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관한 기록 제1권*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한 생존자, 목격자, 그리고 가해자였던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117건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번 조사는 종교적 자유 침해로 인한 피해자 273명을 밝혀냈다. 이중 215명은 기독교 신자였고, 56명은 무속 신앙을 가졌으며 두 명은 다른 종교를 믿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3 살부터 80 세 이상까지 다양했다. 밝혀진 피해자 중 여성과 여아가 약 60%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중국에서 종교 행위를 하거나, 종교적 물품의 소지 혹은 종교인과 접촉, 예배당 등 종교 시설 참석 또는 종교적 신념을 같이 나누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했다. 어떤 경우, 정부는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체포, 구금, 장기간 심문, 강제 송환, 가족의 처벌, 고문, 지속적 신체적 학대, 성폭력, 처형, 공개 재판 및 “주민폭로회”등에 처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경우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가지 위반 혐의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2019 년 12 월, 오픈도어즈 USA 는 *북한: 국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공산주의와 김정은 개인 숭배를 종교 박해의 주요 동인으로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조선노동당 이념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관련 출처를 근거로 2007 년부터 2019 년 12 월까지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서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구체적 사례를 1 천 411 건으로 집계했다. 그 내용으로는 포교, 종교 물품 소지, 종교 활동, 종교인과의 접촉 등이 있었다. 1 천 411 건 중 북한 당국이 연루된 사망자는 126 명(8.9%), 실종자는 94 명(6.7%), 부상자는 79 명 (5.6%), 송환자 또는 강제 이주자는 53 명(3.8%), 구금자는 826 명(58.5%), 이동제한자는 147 명(10.4%), 기타 처벌을 통한 박해를 받은 자는 86 명 (7.9%) 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부기구인 NK 위치는 2019 년 9 월부터 2020 년 7 월 사이 13 만 5 천 명 가량의 정치범들이 네 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나뉘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정부 산하의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2019 년 인권 백서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다섯 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픈도어즈 USA 는 연말 기준으로 5 만에서 7 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5 월, 세계기독교연대 (CSW)는 20 만 명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혐의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세계기독교연대(CSW)와 오픈도어즈 USA 는 정부가 이들을 체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의 친척을 처벌한다는 정책을 유지 중이며 이는 곧 기독교 신자의 친척은 본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구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정보원의 밀고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한 가족 전체가 모두 체포되었다고 한다.

오픈도어즈 USA 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국가를 나타내는 연례 세계 박해 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19년 연속 1위로 꼽았다. 오픈도어즈 USA 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노동 수용소로 추방되거나 현장에서 처형을 당한다”고 했다. 오픈도어즈 USA 는 외국 선교사 체포 및 납치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전혀 설 곳이 없다. 다른 교인을 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감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져야 한다.” 오픈도어즈 USA 보고서는 2018년 2월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외교 활동들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를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을 포함해 “일탈적 사상”을 가진 이들을 적발 및 처벌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이 더욱 증가했다고 전해진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구타·고문·살해되었다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2018년 한 탈북자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말하기를 어떤 여성 기독교 신자가 구금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고 물을 주지 않아 탈수증으로 숨졌다고 한다. 2017년 한 탈북자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증언하기를 한 여성 기독교 신자가 구금되어 있을 때 매우 아팠고 혼자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간수에게 질문을 했다가 간수가 국자로 그녀를 때려 죽였다고 한다.

코리아미래전략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고문에는 사람을 철봉에 매달아 놓고 각목으로 때리기, 거꾸로 매달기, 몸에 막대기를 끼워 비틀기, 강제로 “쪼그려 앉아 뛰기,” 매일 수 백 번 수 천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매운 고춧가루를 섞은 액체를 강제로 콧구멍으로 들이붓기, 종아리 뒤 각목 끼우고 꿇어 앉히기, 목 조르기, 다른 수감자들의 처형이나 고문 목격 강요, 굶주림, 오염된 음식 강제로 먹이기, 독방 감금, 수면 박탈, 하루에 12시간 이상 고정 자세 강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또한 무속 신앙을 믿는 이들에게 가해진 고문과 신체 폭력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무속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년 간 수감되었던 한 피해자는 반복되는 신체 폭력으로 두 눈에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코리아미래전략에 따르면 당국은 임신한 신도들에게 구금 중에 강제 낙태를 종용하거나 출산 직후 태어난 영아를 질식사 시키기도 했다.

코리아미래전략은 또한 정부 관리들이 주민들에게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소지한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고 강이나 “인민반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과 그 가족 구성원을 감옥에 보낸 여러 건의 사례를 기록했다. 한 사례로는, 노동당 당원이 성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3천명의 주민의 보는 가운데 혜산 비행장에서 처형당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자신의 친척이 십자가와 성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그 친척의 파트너가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조사관에게 말했다.

2019년 9월, 기독교권익단체 순교자의 목소리 USA (VOM)는 유튜브에 “정부 교육 영상”이라 설명한 영상물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물에서 내레이터는 사리원 출신 차덕선이란 이름의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한다. 그녀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갔으며 그 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내레이터는 교회 목사들이 위장한 한국 비밀 요원들이었으며 개종자들은 “스파이”였다고 말한다. 차씨는 북한으로 돌아와 전국을 돌며 전도를 하고 지하 교회를 조직한다. 내레이터는 차씨를 “광신도”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영상물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그 외 “가치 없는 사람들”을 개종한다. 그러다가 “우리의 양심적인 시민 중 한 사람”이 차씨를 당국에 신고하고 그녀는 체포된다. VOM은 “차덕선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불분명하나,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미래전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성경과 같은 종교적인 물품을 소지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개인들을 체포하고 처형했다. 한 사례에서, 북한으로 성경을 들여온 피해자는 체포된 후 양강도 삼지연 병원 근처에서 300여명의 목격자 앞에서 총살되었다. 또 다른 경우, 종교인들과 접촉했던 피해자는 함경북도에서 구금된 후

조사를 받았다. 구금 당시, 한 담당관이 그녀에게 “야, 너 [욕설]. 신이 네가 여기 있는 것을 아니?”라고 소리질렀다. 그는 피해자에게 감방에서 두 손 두 발로 기어 나오라고 명령한 후 그녀를 나무 곤봉으로 구타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하면, 구금 시설 내에서 종교 활동을 행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실종된 사례가 2016 년에 보고됐다.

국제 NGO 들과 탈북자들은 기도, 찬송가 부르기, 성경 읽기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활동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가혹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 통일연구원(KINU)에서 발간한 2019 년도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점을 보는 것을 포함한 미신행위와 종교 활동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나 탈북자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소지한 경우 또는 기독교 선교사들과 연관되었을 때 매우 엄한 처벌을 받았다. 당국은 미신 행위에 연루된 자에게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처벌은 뇌물을 이용하면 무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미래전략은 종교 관련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의 가족 구성원들도 결국에는 표적이 되는 사례들을 기록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심지어 세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의 체포로 이어졌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체포되었다. 조사관들은 또한 종교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배우자들이 피해자와 강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기록했다.

RFA 에 따르면 2019 년 북한 당국은 파룬궁 신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종교 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을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억류되어 “스파이 및 모략행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 명의 한국인 선교사 – 김정욱 (2013 년 10 월 억류), 김국기 (2014 년 10 월 억류), 최춘길 (2014 년 12 월 억류) -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었다. 2018 년 12 월 코리아 타임즈는 한국 정부가 이들의 석방 협상을 시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 동안 VOM 은 서신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창바이에 살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 장문석 (중국어름 장웬시)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VOM 은 “장 집사”가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도왔으며 그들과 자신의 신앙을 나누었다고 보고했다. VOM 에 따르면 2014 년 11 월,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장씨를 납치하여 감금한 후 징역 15 년 형을 선고했다.

2019 년, 북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주민이 민방위에 참여하고 기꺼이 국방에 동원될 것을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는 전무했다.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이전 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현 지도자인 김정은의 개인 이상화 정책과 정부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교적인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지도자의 최고 권위를 부정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학자들은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가 일종의 국가후원 신학의 형태와 흡사하다고 말한다. 북한 전역에 약 10 만 곳의 주체사상 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연구원의 2019 년 백서에서 한 탈북자는 “북한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억압하는데 이는 1 인 독재체제가 종교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2014 년 COI 보고서는 기독교가 북한의 개인 이상화 정책에 반하고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정치적 조직과 활동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동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정부에서 통제하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박해와 폭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처벌이나 보복 혹은 감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북한에 권고했다.

NGO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관용을 베푸는 시늉을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통일연구원은 2019 연례인권백서에서 “북한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헌법은 명목상의 자유만을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허용하며 그 또한 북한 정권이 이를 정책적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때에만 주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7년과 2018년 3월 사이 12,625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6퍼센트가 북한에는 종교적 자유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18년 기준 북한 내 121곳의 종교 시설이 있다고 추산했는데, 여기에는 불교 사찰 60곳, 천도교 교당 52곳, 국영 개신교 교회 3곳,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성당 1곳이 포함되었다. 통일연구원의 2015년 연례백서는 60곳의 불교 사찰이 있고 대부분의 주민은 불교 사찰을 종교 시설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불교 승려를 종교인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사찰들은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로 여겨졌다. 통일연구원의 2019년 연례백서는 평양 외부에는 종교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통일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하여 인가된 종교 단체를 대외적 선동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주민들은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장소를 대개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로 인식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방에 교회나 종교 시설이 부족한 것은 일반 주민들이 종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2020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비록 북한 내 칠골 교회, 봉수 교회, 장충 성당 등 다수의 교회 및 종교 시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온전히 국가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그러므로 진정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특히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997년과 2019년 사이 인터뷰한 13,958명의 탈북자 중 2.5퍼센트 미만만이 종교 시설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4년 COI 보고서는 당국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소수의 교회를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증명하는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통제하는 평양 소재의 기독교 교회는 5 곳이 있는데 3 곳의 개신교 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 제일교회), 천주교 성당 (장충 성당), 그리고 모스크바 총대주교구 소속의 러시아 정교회 정백사원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개신교 교회인 칠골교회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모이자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예배가 예정대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다. 과거 평양 시내 또는 근교에 살았던 일부 탈북자들이 이들 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통일연구원 보고서에서 한 탈북자는 평양에 살았을 때, 찬송가를 들으려고 교회 밖에 너무 오래 얼쩡거리거나 매주 예배가 진행 중일 때 그 근처를 꾸준히 지나다닌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기독교 신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탈북자는 예배 시 찬송가를 허용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록 허가함으로써 교회에 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당국이 재빨리 알아차렸으며, 이러한 결과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평양 밖에서 거주했던 다수의 탈북자들은 이들 교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과거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기독교 신자가 부활절 주일에 교회를 찾았을 때 문이 닫혀 있었으며 다수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교회 활동이 연출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북한에 대한 문서에서 오픈도어즈 USA는 “평양에서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교회들은 선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지난 몇 년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 의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신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교회를 다녀갔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 신도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외국인들은 신도들과 제한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도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 수준을 외국인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당국이 이들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2019년 통일연구원 백서는 1988년 9월 건립된 평양의 봉수

개신교 교회의 사례를 진술했다. 탈북자들은 건물 관리인과 그 가족만이 그 곳에 거주했으며 외국인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에만 신중하게 선별된 40~50 세의 주민 수백명이 교회에 모여 거짓 예배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정부의 2002 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 개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하지만 2019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그러한 ‘가정 예배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탈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8 년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에 언급된 12,810 명의 탈북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 교회라는 것을 본적이 없었고 응답자의 단 1.3 퍼센트만이 가정 교회의 존재를 믿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8 년 보고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정교회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 단체들이 북한에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2015 년 남북 종교간 교류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극히 미미했다.

정부가 설립한 조선가톨릭협회는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지만 바티칸 교황청은 이를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는 교황청이 인정하는 가톨릭 사제나 수도자 혹은 수녀 또한 상주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 종교지도자들에 따르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개신교 목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상주 목사인지 혹은 임시로 체재하는 목사인지는 확실치 않다.

일설에 의하면 5 명의 러시아정교회 사제들이 북한에 체류중인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펼치기 위해 정백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제 중에는 북한인도 있으며, 그 중 여러명은 모스크바 러시아정교회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고 한다.

2019 년에 UPI 는 국영언론 려명이 평양 장충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주일미사를 보도한 것을 인용했다. 려명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외국인 신도가 참석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부 관계자들이 항구, 세관 검문소, 공항에서 종교적 물건이나 기타 정부가 불온한 것으로 여기는 물품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소포 및 소지품을 철저히 검색한다고 보고했다. 오픈도어즈 USA 는 일부 개인이 성경과 기타 종교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오디오 기기를 중국에서 들여오기도 했고 라디오를 밀반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해외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했다고 보고했다.

코리아미래전략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특히 기독교에 초점을 맞춘 반종교적 사상을 학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와 천도교가 종교보다는 역사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설명되는 반면, 기독교는 공립학교 체계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다수 응답자들이 강간, 흡혈, 장기 적출, 살인, 스파이 행위 등 기독교 전도사들의 “악한 행동”을 나열한 부분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6 월에 정부는 한국 국경에 근접한 도시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폭파는 한국 내 탈북자 단체가 북한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과 기타 문서를 국경 너머로 살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졌다. 기독교 언론은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전단 중에는 탈북 기독교인들이 쓴 소책자와 증언, 실물 성경, USB 에 담긴 디지털 성경 등을 포함한 기독교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선전선동부 제 1 부부장이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러한 전단을 살포한 사람들을 “배신자”,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 계급과 출신 성분, 정권에 대한 지지를 기준으로 주민의 신분을 분류하는 ‘성분’ 제도에서 종교는 개인을 최하층 성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계속해서 이용되었다. 성분 분류는 교육, 의료, 고용 기회, 주거 등의 분야에서 차별로 이어진다. 통일연구원은 종교인과 그 가족들은 “반동분자”로 여겨진다고 보고했다.

통일연구원의 2019 년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계속해서 종교를 서구 외세의 침입 수단으로 간주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통일연구원은 북한사회과학원의 “철학사전”이 “종교는 역사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장악해 왔으며 착취와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저개발국가를 침략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있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당국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자를 적발하는 방법을 최소한 1 년에 2 회 이상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난민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 전복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이 단체들이 첩보 수집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가 코로나 19 전파를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국경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원조 및 구호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 년 아시아 타임즈는 한국의 기독교 자선단체들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때때로 정치적인 이유로 원조를 거절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선단체들이 지하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밀리에 원조를 제공하였다고 보도했다.

12 월 유엔총회는 미국이 공동 발의한 “북한 내에서 당국에 의해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사상·양심·종교·신념·의견·표현·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UN 총회는 또한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온전히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례결의안은 안보리가 COI 의 관련 결론과 권고를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했다.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종교 활동을 하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폐쇄성이 심해졌다.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기독교가 악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선전으로 일반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당국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활동을 이웃,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픈도어스 USA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퍼진 지속적인 교화로 인해, 기독교 신자들은 사회 적대 분자로 간주되었고, 가족구성원과 이웃은 동네 밀고자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당국에 수상한 활동을 신고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는 쪽을 선호했다.”

2019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紙)는 탈북자 한 명이 북한에 살 때 주일마다 나머지 가족들이 조용하게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한 명은 망을 본 경험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탈북자 한 명은 화장실이나 이불 밑에 숨어서 기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스 USA는 개인이 소유한 성경, 묵상 서적, 기독교 서적, 찬송가 다수가 1920년대부터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사이에 출판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서적은 숨겨져서 신도들 사이에 전해져 왔다. 한 남성은 사람들이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서 기독교를 전도할 때는 가족간이라도 조심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른 기독교인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일부 신자가 그렇게 하려면, 전적으로 비밀리에 만나야 한다.”

2019년, 통일연구원은 북한 내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다시 보고했으나 지하 교회의 존재 여부나 지하 종교 활동의 범위는 여전히 수치화하기 어려웠다. 일부 NGO와 학자들은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대규모 지하 교회의 존재에 의문을 표하고 지하 종교인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각각의 지하 회중의 규모는 매우 소규모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거주지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9월

순교자의 소리가 공개한 “[북한 정권] 교육 영상”속의 나레이션에 따르면 차덕순과 기독교 신자들은 숲에서 만났다. 일부 탈북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허용되지 않은 종교 물품이 입수되고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단체와 국경 지역에서 접촉을 계기로 비밀리에 모임이 열린다고 전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10 월에 발간된 북한인권정보센터 연례백서에 따르면 2000 년 이후 많게는 탈북자 559 명이 “성경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997 년부터 2019 년까지 탈북한 14,091 명 가운데,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었다고 답한 사람이 167 명(1.2 퍼센트)에 불과했다고 서술했다. 13,557 명 중 677 명(5 퍼센트)만 다른 사람이 비밀리에 믿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코로나 19 로 인한 제약으로 개인은 결혼식, 장례식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행사와 관련된 종교 예식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결혼식과 장례식에 여전히 샤머니즘적 요소가 남아있다고 한다.

코리아미래전략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당해 동안 샤머니즘을 없애는 캠페인을 강화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미신 행위”를 경고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시를 아파트 건물에 게시했다. 하지만 NGO 들은 평양을 포함하여 샤머니즘적 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코리아미래전략은 일반 주민, 관료 모두가 불법으로 샤머니즘적 행위를 한다고 전했다. 조사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전통 예식, 점술, 관상학, 굿, 부적, 기독교 성경 사용, 사주, 타로점 등의 샤머니즘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수집했다. 한 소식통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획하거나,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흔하다고 RFA 에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정부 관리들이 자신의 건강과 직장을 두고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아시아프레스에 전했다. NGO 들은 당국은 샤머니즘적 행위를 금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처벌받는 점쟁이들은 “틀린 예측을 많이 한” 이들이며 따라서 관리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용한 점쟁이들은 관리들의 돈을 받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19 년에 탈출한 탈북자는 “처벌이 심할 경우, 샤머니즘적 행위를 하다 걸린

사람은 교화소 최장 5 년형을 받는다. 예전에는 3~6 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코리아미래전략 조사관에게 전했다.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과 관여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외교 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오래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유엔총회는 12 월에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종교적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양심·종교·신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침해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정부는 다자 포럼 그리고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와 양자 회담을 통해 북한내 종교의 자유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10 월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행동을 조율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 문제 해결이 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탈북자 및 북한 관련 NGO 들과 만났다.

9 월 바티칸 연설에서 국무장관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자유를 지지하고 북한에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박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10 월 27 일 국제 종교자유 날을 맞이하여, 장관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종교 자유 박해국”중 하나라고 칭했다.

2001 년 이래 북한은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 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우려대상국(CPC)으로 지정되었다. 2020 년 12 월 2 일,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이에 수반된 다음의 제재 조치, 1974 년 제정 무역법(잭슨-베닉 수정조항) 제 402 조와 제 409 조 그리고 동법 제 402(c)(5)호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행중인 제재 조치들을 확인했다.